

# 中 기업 디폴트 125% 급증... '차이나채권 투자 주의보'

### 3년간 중국 기업상환액 1.7조달러 CERC·신창집단 회사채 '디폴트' 신흥국 채권중 절반이 중국 회사채

저금리 시대, 빠르게 부채를 늘려온 중국 기업들의 채권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 긴축 기조를 서두르면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향후 중국 기업이 상환해야 할 대규모 부채가 남아 있는 만큼 중국 채권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고 있다.

8일 금융조사업체 딜 로직에 따르면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하는 채권은 3조2297억 달러다. 회사채가 90%, 국채가 10%다. 상환액은 올해 8819억달러, 2019년 1조1000억달러,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구

〈국가별 기업 디폴트 규모〉

지역	국가	2015	2016	2017	2018 1~7월
아시아	중국	2,692.2	4,108.4	3,355.4	7,558.7
	한국	0.0	1,178.5	34.7	0.0
	인도	175.0	1,146.7	420.3	0.0
	인도네시아	1,072.5	1,000.0	325.0	0.0
	말레이시아	0.0	100.0	70.5	0.0
동유럽	태국	19.0	0.0	0.0	0.0
	러시아	1,339.9	3,618.5	1,211.5	363.4
	폴란드	62.3	666.3	1.4	0.0
중남미	터키	200.0	295.5	0.0	0.0
	콜롬비아	11.0	0.0	0.0	0.0
	베네수엘라	0.0	0.0	34,938.5	9,000.0
	브라질	9,725.0	27,988.2	540.0	1,000.0
	멕시코	1,400.0	1,925.0	0.0	0.0
	칠레	0.0	695.0	0.0	0.0

단위:백만달러 /자료=EIloomberg

모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 중 상환해야 할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전체 신흥국의 회사채 발행규모(5조6860억달러)에서 중국 회사채 비중은 84.0%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흥국의 회사채 발행은 연 평균

26.8%로 고속성장해왔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서다.

때문에 향후 3년간 중국 정부와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채권은 1조7531억달러에 달한다. 신흥국 전체의 5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신흥국 중 러시

아(1330억달러), 멕시코(881억달러), 브라질(1360억달러)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기업이 설비투자과 금융자산 매입 등을 위해 부채를 늘려온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과잉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통화긴축정책을 서두르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기업 채무불이행 규모는 올해 7월까지 76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125.2% 확대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석유 및 가스공급기업인 CERC(China Energy Reserve & Chemicals Group)와 홍콩 상장 부동산개발회사인 신창집단(新昌集團)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채무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전체 기업 채무불이행 규모 대비 미달러화 비중은 63.4%, 중국 위안화의 경우 33.1%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상환기간 도래시 채권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보완해야 하지만 중국은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충분하지 않아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액도 상당하다.

향후 2019년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신흥국 회사채(3만9896건) 중 절반 이상인 2만2239건이 중국 회사채다. 특히 중국 기업 중 BB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전체 22.8%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저금리 시대에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디폴트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관련 채권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마트 "폭염엔 '냉동과일' 드세요" 이마트가 8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40대에 육박하는 폭염에 매출이 급증한 냉동과일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9일(목)부터 16일(수)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냉동 블루베리/애플망고/딸기/트리플베리 300g 4종을 각 1,980원에 판매하며 2개 이상 구매 시 1개를 무료 증정한다. /손영지 기자 son@

## 유럽으로 번진 '화재공포'... BMW 32만대 리콜

### 국토부 운행중지 명령 방안 검토 韓 화재 유발 기술결함 시정 차원

BMW가 국내에서 엔진 화재를 일으킨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테크니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8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따르면 유럽에서 디젤차 32만4000대에 대한 '테크니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9만6300대는 현재 독일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크니컬 캠페인은 리콜에 준하는 조치다. 3시리즈부터 X6까지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에 대한 자발적 대응이다. BMW는 테크니컬 캠페인을 진행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듈을 교체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에서는 BMW 디젤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결함에 따른 화재가 34건이나 발생했다. 이



지만 화재가 난 차량 모델은 1월 X6, 528i, 2월 428i, 5월 X5 30d, 미니쿠퍼 D, 740i, 7월 미니쿠퍼 5도어, 8월 745i 등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는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지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정영민 기자 yw964@

## 유진투자증권 매매시스템 구멍 1700만원어치 '유령주식' 풀려

### 해외ETF 4대1 병합했는데 수량 같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 거래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4배 이상 오른 것을 보고 보유하고 있던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주식병합이란 둘 이상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을 공장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4배로 뛰고 수량은 그대로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위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매도했고, 이는 정상 체결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데 들어간 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애초 증권사가 주식병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HTS에 매도가능 주식이 665주로 나와 있어 그대로 판 만큼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가격이 하루 새 4배가 뛰었는데 이를 모르고 매도했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A씨가 마땅히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된 의견 대립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거래시 현지 위탁결제원과 국내 위탁결제원 간의 시차 문제로 주식병합 등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현지 위탁결제원과 국내 위탁결제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 외국인 돌아왔다... 4개월 만에 1억2000만달러 매수

### 한은 "3월 이후 처음... 소폭 유입"

한국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들이 4개월 만에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7월 중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7월 한 달간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유입액은 14억3000만달러다.

4월 14억달러 유출한 바 있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5월 27억달러 유입으로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유입 행진을 이어갔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13억1000만달러 유입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1억2000만달러가

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입세로 돌아선 것은 3월(1억7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무역분쟁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주식자금이 소폭 유입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원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7월 말 원·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118.7원으로 6월 말(1114.5원)보다 올랐다.

원·엔 환율은 6월 말 100엔당 1006.9원에서 7월 말 1004.7원으로 떨어졌다.

원·위안 환율도 같은 기간 위안당

168.19원에서 163.66원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축소했다. 지난 달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평균 3.9%(변동률 0.34%)로 전월(5.2%, 변동률 0.47%)보다 줄었다.

월평균 환율과 매일 증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기간 중 표준편차'는 6월 19.1원에서 지난달 6.7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5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았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채권 발행 때 비용이 늘어나면 상승한다. /김희주 기자 hj9@